

건설동향브리핑

제528호 (2015. 9. 14)

■ 정책 · 이슈

- 2016년 SOC 예산안, 올해보다 6.0% 감액된 23.3조원
- 2015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및 2016년 제도 개정사항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개선사항

■ 경제 동향

- 1~7월 주택 인허가 · 분양 급증, 준공은 감소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란 : 해외건설 지원정책에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16년 SOC 예산안, 올해보다 6.0% 감액된 23.3조원

- 4년 내 최저치, 분야별로 산업단지 29.9% 감소, 일부 안전투자는 증가 -

■ 2016년 SOC 예산안, 금년 대비 1.5조원 축소

-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8일,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뒷받침하기 위해 2016년 전체 예산안을 올해보다 3.0% 증가한 386.7조원으로 편성함.
 -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청년 희망, 경제 혁신, 문화 융성, 민생 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이끌겠다고 밝힘.
- 2016년도 SOC 예산은 23.3조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올해보다 1.5조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분야별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 산업이 2.0% 감축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올해보다 증가되는데, SOC 예산은 올해보다 6.0%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큼.
 - 정부는 축적된 스톡 등을 감안, SOC 투자규모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복지와 국방, 교육 등에 지출해야 할 고정 예산 증가로 재정 운용 여력이 감소한 것이 SOC 예산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2016년 예산안 분야별 자원 배분>

(단위 : 조원)

<2016년 예산안 분야별 증가율>

(단위 : %)

자료 : 기획재정부, 2015.9.8.

■ 산업단지 예산 29.9% 감소, 항만 및 안전관련 투자 예산은 일부 증액

- SOC 예산 23.3조원은 4년 만의 최저치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해운·항만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단지 예산은 29.2% 감소함.
- 도로는 계속사업의 완공 및 교통안전 강화 위주로 신규 사업은 최소화할 계획이며, 올해보다 7.8% 감소한 8.4조원의 예산이 편성됨.
 - 국도 완공사업은 2015년 29건, 3,279억원에서 2016년 61건, 9,656억원으로 계획되었으며, 도로 안전투자는 올해보다 0.1조원 증가한 1.3조원으로 편성됨.
- 철도의 경우 3.0%가 감소한 7.2조원이 계획되었는데, 국가 간선철도망의 적기 공급과 함께 노후 선로시설 교체 및 재해예방시설 보강 등 안전 투자는 증액됨.
 - 이천·문경 철도, 하남선 복선전철은 각각 1,112억원, 1,250억원으로 올해보다 증가했으며, 일반철도 시설개량 예산 또한 4,149억원에서 4,488억원으로 증액됨.
- 해운·항만은 부산신항과 평택·당진항의 예산 증가로 올해보다 3.2% 증가할 전망이다.
 - 부산신항 : (2015년) 1,374억원→(2016년 안) 1,844억원
 - 평택·당진항 : (2015년) 363억원→(2016년 안) 521억원
 - 3개 항만(부산/광양/인천) 클러스터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6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한편,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쇠퇴 도심을 재생하여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고, 새만금·세종시 등 주요 지역개발계획의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으로, 올해 420억원에서 내년 480억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SOC 예산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¹⁾ (추경미포함, B)	2016년 (예산안, A)	증감률 (A/B, %)
▪ 도로	74,487	77,614	91,667	84,695	90,845	83,720	-7.8
▪ 철도(도시철도 포함)	54,055	61,141	69,913	68,032	74,051	71,828	-3.0
▪ 수자원	50,182	29,020	23,694	23,830	22,731	21,749	-4.3
▪ 해운, 항만, 공항 등	65,681	63,151	61,759	60,339	60,441	55,822	-7.6
해운, 항만	-	-	-	-	16,643	17,183	3.2
산업단지	-	-	-	-	8,903	6,300	-29.2
물류, 지역 및 도시 등	-	-	-	-	34,895	32,339	-7.3
합계	244,405	230,926	247,033	236,896	248,068	233,119	-6.0

주 : 2015년 SOC 예산은 추경을 포함할 경우 26.1조원임.

자료 : 기획재정부가 9월 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재구성함.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2015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및 2016년 제도 개정사항

- 주택경기 회복으로 중견업체 약진, 긍정적 기능 유지 위해 지속적 보완 필요 -

■ 시공능력평가제도, '건설업체의 정보 제공 기능' 성격 강해

- 현재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업체의 수주 능력을 보여주는 정보 제공 기능뿐만 아니라 공공공사 물량 배분을 위한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시공능력평가¹⁾는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건설업체가 1건당 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금액으로 나타낸 것임.
 - 이러한 평가 결과는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의 운용, 제한 및 지명경쟁 입찰참가 제한을 위한 기준의 설정, 공사대금 하한적용 대상 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됨으로써 입찰 전 단계에서 개별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함.

■ 중견 업체의 약진 및 부실업체 순위 하락

- 2015년 시공능력평가 결과, 먼저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삼성물산이 16조 7,267억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함. 이는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수주한 대형 프로젝트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져 경영평가액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됨.
- 다음으로 중견 건설업체의 약진을 들 수 있음. 최근 국내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해외 건설에 초점을 두는 대형 건설업체와 달리 주택사업을 위주로 하는 중견 건설업체의 순위가 상승함.
 - 주택업체인 부영의 경우 최근 5년 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75위(2011년)→69위(2012년)→31위(2013년)→16위(2014년)→12위(2015년)로 급상승함. 호반건설 역시 49위(2011년)→32위(2012년)→24위(2013년)→15위(2014년, 2015년)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건설업체의 대다수가 전년 대비 순위 하락을 보임.

1) 시공능력평가 순위의 발표 분야는 토건(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등으로 나뉘지만 일반적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는 토건을 의미함. 본고에서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또한 토건을 의미함.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대 건설업체 중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업체는 현재 총 14곳으로 이 중 1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순위가 모두 하락함. 내년부터 변화되는 시공능력평가 방식에 맞춰 적극적인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내년부터 시공능력평가 방식 변화, 제도에 대한 주기적 검토 필요

- 앞서 설명하였듯이 시공능력평가는 제도가 가진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평가 항목과 항목별 가중치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시공능력평가가 변화됨.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시공능력평가제도 개념의 재규정으로 현재까지는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을 의미했으나 내년부터는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로 개정될 예정임.
 - 둘째, 항목별 평가 방식의 변화임. 즉, 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 간 단순 평균’에서 3차 연도에 0.8, 2차 연도에 1.0, 1차 연도(최근 연도)에 1.2의 가중치를 줌으로써 가장 최근 연도 공사 실적에 가중치를 더 주도록 함. 경영평가액은 현재 평가 지표인 유동비율을 차입금의존도와 이자보상비율로 대체하며,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이 음수인 경우 경영평가액을 공제하도록 개정함. 또한, 부실업체에 대한 재평가 방안도 마련함.
 - 마지막으로 항목별 비중의 변화임. 최근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재무 상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실적평가액은 75%에서 70%로 비중이 축소되고, 경영평가액은 75%에서 80%로 비중이 확대됨.
- 향후에도 시공능력평가가 가지는 긍정적인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주요 시공능력평가 항목의 개정사항>

	현행	개정
개념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의 공사 예정 금액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
공사실적평가액	· 평가 방식 : 최근 3년간 단순 평균 · 비중 : 75%	· 평가 방식 : 최근 3년간 실적 가중 평균 · 비중 : 70%
경영평가액	· 평가 방식 :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본회전율 · 비중 : 75%	· 평가 방식 :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순이익률, 총자본회전율 · 비중 : 80%

최은정(책임연구원 · kciel21@cerik.re.kr)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개선사항

- 공정계약 체결 유도 위해선 불명확한 계약조건 개선 및 지속적 보완 필요 -

■ 개선의 필요성

- 국토교통부는 민간 부문 건설공사 발주시 발주자와 건설업자 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 계약의 표준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정·고시하고 있음.
 - 종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표준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토록 규정하던 것을 2013년 8월 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 상향함.
 - 현재 동 고시는 고시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위한 재검토 기한(2015.8.23)이 경과함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작업 중에 있음.
- 그러나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계약조건 일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조건을 일부 유리하게 변경함으로써 수급인이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건설공사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을 표준도급계약조건에 반영하는 등 사후 법 적용을 통한 해결보다 초기 계약 단계부터 불공정한 계약 및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8~9월 3주간 공사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응답자 수 88명)를 실시한 결과, 민간건설공사 발주시 표준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발주자가 임의적으로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표준도급계약서의 조항 변경 및 부당한 특약을 부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또한, 표준도급계약서의 조항들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하여 표준도급계약서의 당초 제정 취지와 달리 분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음.
- 표준도급계약서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건설기업들의 지속적인 개선 건의 내용

들을 종합하여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발주자가 사용승인을 취득한 후에 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검사를 거부함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과 과도한 지체상금률로 인한 피해가 있었음.
- 또한, 전문성이 부족한 공사감독원 선임으로 인한 품질과 안전 확보에의 애로와 공사 감독원의 요구·지시에 의한 부적합 시공에 대한 시공업체의 일방적 책임 부여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 시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공사의 변경·중지시 변경계약서의 교부 의무 불이행과 표준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의 불명확한 책임 면제 사유도 지적됨.
- 이와 함께 계약조건상 ‘불가항력’의 개념에 대한 해석 문제와 하자판정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한 처리원칙 부재의 문제 등도 지적됨.

■ 개선 방안

- 표준도급계약서상의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에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공건설공사 지체상금률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 수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불가항력’ 사유 발생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함.
 - 또한 부적합 시공 발생시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항은 명확히 책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함.
- 민간건설공사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관행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공사감독원의 선임에 따른 공사 수행의 차질이 유발되지 않도록 자격기준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 준공검사 기피에 따른 발주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 하자 판정기준과 조사방법 등의 명시, 그리고 발주자의 불공정 특약에 의한 계약의 무효 명시 등이 필요함.
- 표준도급계약서가 민간건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개정 사항들을 표준도급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김용중(연구위원 · yongjung_kim@cerik.re.kr)

1~7월 주택 인허가·분양 급증, 준공은 감소

- 입주 가능 준공 물량 감소로 전세가 상승, 인허가·분양 증가로 이어져 -

■ 1~7월 인허가, 수도권 아파트 중심 급증 지속

- 1~7월까지 주택 인허가 실적은 38만 2,916호로, 전년 동기 대비 44.8% 증가함. 수도권 79.9%, 기타광역시 12.9%, 기타지방 19.8% 증가
 - 수도권은 경기(109.9%)·인천(70.9%)과 아파트의 증가세(아파트 100.7%, 아파트외 52.5%)가 두드러짐. 특히 경기 아파트는 143.5% 급증함.
 - 기타광역시는 아파트의 증가율(아파트 15.1%, 아파트외 6.1%)이 비교적 높고, 기타지방은 아파트(19.5%)와 아파트외(20.3%)의 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지역적 편차가 커서 수도권과 부산, 대전, 경북, 충북, 제주는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였으나, 대구, 울산, 경남, 전남은 감소세를 나타냄.

<1~7월 주택 인허가 실적>

(단위 : 호, %)

구분	지역별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전국	수도권	기타 광역시	기타 지방	전국	수도권	기타 광역시	기타 지방	전국	수도권	기타 광역시	기타 지방
2015년 1~7월	382,916	205,217	41,303	136,396	23,878	10,109	1,814	11,955	359,038	195,108	39,489	124,441
2014년 1~7월	264,535	114,057	36,594	113,884	9,443	2,024	337	7,082	255,092	112,033	36,257	106,802
전년 대비 증감률	44.8	79.9	12.9	19.8	152.9	399.5	438.3	68.8	40.7	74.2	8.9	16.5

자료 : 국토교통부

■ 경기·인천 지역 분양 물량 증가

- 1~7월까지 분양승인실적은 전국적으로 16만 4,983호로 전년 동기 대비 52.8% 증가함.
 - 전국적으로 일반분양 64.9%, 임대 15.3%, 조합 51.6% 증가함. 경기 호황세가 지속됨에 따라 일반분양분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에 따른 조합 물량 증가세가 이어짐.
 - 특히, 수도권은 109.4%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의 분양이 이루어짐. 서울은 10.1% 감소하였으나, 경기(156.0%), 인천(149.5%)에서 크게 증가함.
 - 지방도 20.2% 증가하였고 울산, 강원, 제주에서 세 자릿수 이상 증가함.

■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준공 물량 감소

- 1~7월까지 준공실적은 23만 6,427호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함. 서울의 감소세 (-23.1%)가 큼.
 - 수도권 1.9%, 기타광역시 16.5% 감소하였고 기타지방은 4.5% 증가함.
 - 전국 아파트 준공실적은 9.9% 감소하였고 수도권에서 14.7%, 기타광역시는 20.0% 감소함. 경기 아파트 준공이 12.1% 증가하였지만, 서울 아파트에서 48.5% 감소하여 수도권 전세가격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반면, 아파트외 준공실적은 전국적으로 11.3% 증가함. 수도권은 17.3%, 기타지방 7.7% 증가하였으나, 기타광역시 3.9% 감소함.

<1~7월 주택 준공 실적>

(단위 : 호, %)

구분	주택			아파트			아파트외		
	2014년 (1~7월)	2015년 (1~7월)	전년 동기비	2014년 (1~7월)	2015년 (1~7월)	전년 동기비	2014년 (1~7월)	2015년 (1~7월)	전년 동기비
전국	242,815	236,427	-2.6	159,626	143,819	-9.9	83,189	92,608	11.3
수도권	110,425	108,303	-1.9	66,257	56,508	-14.7	44,168	51,795	17.3
기타광역시	48,422	40,413	-16.5	38,084	30,480	-20.0	10,338	9,933	-3.9
기타지방	83,968	87,711	4.5	55,285	56,831	2.8	28,683	30,880	7.7

자료 : 국토교통부

■ 공급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관리 필요

- 수도권의 인허가, 분양물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준공물량 감소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분양시장 호황의 밑바탕이 되고 있음.
 - 선행지표인 인허가, 분양 실적의 전국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동행지표인 준공 물량이 수도권과 기타광역시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감소세임.
 - 이에 따라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광역시 신규 분양시장 호조세의 바탕이 되고 있음.
- 공급 시차로 발생하고 있는 선행지표와 동행지표의 차이는 향후 공급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존재함.
 - 단기적으로 분양 물량이 집중하고 있어 주택경기 위축시 공급 물량 감소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향후 미입주 등에 대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할 것임.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내용
9. 4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정책국 주최, '2015년 제3차 남북산업자원협력 포럼'에 기획조정실 박용석 실장 주제 발표자로 참여 - 발표 주제 : 통일 과정에서의 북한 인프라 건설
	경기도시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사업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부동산 전망 세미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9. 9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정책과 주최, '서울시 시범위탁 사업 지표점검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참여

■ '2016년 연구과제' 공모

- 우리 연구원은 외부 수요에 부응하는 실용적인 연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16년도에 우리 연구원이 추진할 연구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연구과제를 공모함.
- 기 간 : 2015. 9. 1(화)~30(수)
- 제안대상 : 건설 유관단체, 정부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건설업체 등
- 접 수 처 : kslim@cerik.re.kr / trd8792@cerik.re.kr
- 기 타 : 제안서 등 세부내용은 홈페이지(www.cerik.re.kr) 참조

■ '건설사업관리(CM) 제도개선 및 진흥방안 공청회' 개최

- 일 시 : 2014. 9. 16(수) 14:00~17:00
- 장 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강남구 논현동 소재)
- 주제발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우영 실장, 충북대학교 김옥규 교수
- 주 최 :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관리학회

■ 「CERIK 도서회원」 가입 안내

- 연구원은 건설산업 관련 보고서 및 CERIK저널, 건설동향브리핑 등 연구 결과물을 필요로 하는 관계자 및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음.
- 도서 회원에게는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정책 연구 자료 및 각종 연구 발간물, 정기간행물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으며, 수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문의 : 기업지원팀(Tel. 02-3441-0848)

해외건설 지원정책에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

지난 8월 28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ENR*(Engineering News Records)지의 '2014년 세계 250대 해외건설기업 매출 분석'에서 우리나라가 7.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013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세계 5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해외건설시장 확대를 위해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금융지원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은 건설기업의 관점에서 미세 조정될 필요가 있다. 최근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개발협력기구)는 통계데이터의 확충을 통해 국제화 현상을 국가적 관점의 수출, 수입, 해외투자 같은 거시변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의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거시변수의 규모가 아니라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은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추가비용은 해외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수익으로 보전될 수 있는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기업 차원의 통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국제화에 참여하는 기업은 일부 소수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WTO의 보고서 *World Trade Report 2013*가 인용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미국 수출물량의 96%는 상위 10%의 수출기업이 차지했으며,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상위 10% 수출기업이 수출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프랑스에서는 84%, 독일에서는 90%, 그리고 영국에서는 80%에 달했다. 그리고 국제화에 성공한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규모가 더 크고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더 많은 숙련공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하는 등 결국 생산성이 더 높았다. 한편, 국제화의 결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진화하는 학습효과는 미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기존에 진출한 기업의 시장점유율 증가보다는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수를 확대하는 방법이 해외건설시장 확대에 더 효율적이므로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화를 통한 학습효과가 전무하므로 국내시장에서 검증된 우량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정부의 지원을 해당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건설시장을 세분해 건설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치사슬의 특정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해당 기업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빈재익(연구위원 · jipins@cerik.re.kr)